

---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경정비 10월 교육자료

---

2018. 10.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경정비 9월 교육자료

## □ 안전사고 예방

### 1. 정비 및 민원처리 시 안전사고 예방

- 도로 등 점유하여 작업 시 경광등 및 싸인보드 점등, 나바콘 설치, 안전봉 활용하여 도로주행 차량에 작업사실 알릴 것
- 교차로 등 위험지역 작업 시 고소차 2대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업소에 보고하고 관할경찰의 협조를 받아 작업을 시행할 것
-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 및 고소차 붐대 이상 유무 확인 및 안전발판 고정 후 작업하고 우천, 습기 등에 의한 감전, 낙상 사고 등이 없도록 주의할 것

### 2. 차량 점검 철저 및 사고예방

- 운행 전 점검, 보고, 정비 후 차량 운행하고 업무 수행 중 사소한 차량 이상이라도 발견 즉시 운행 및 작업 중단할 것
- 안전운전, 양보운전 및 교통신호 등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끼어들기, 경적 사용 등을 자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쾌감을 방지할 것
- 긴급 출동 시 경광등 등을 점등하여 긴급사항임을 알리며 출동할 것

### 3. 사업소 내의 안전사고 예방

- 현장 출동, 퇴근 시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전열기 전원 차단, 조명 소등하고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

※ 별첨 : 고소작업차 현장 안전수칙

## □ 재발민원 방지 및 민원친절

### 1. 당직민원처리

- 당직근무 민원처리 시 민원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이 어려울 경우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종결될 수 있도록 할 것

※ 민원 출동 시 사전에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소모품을 확보하여 출동하고 '수리중' 은 경정비 대상이 아니거나 어려울 경우 부착할 것

### 2. 재발민원 방지

- 신속 민원처리 및 동일 건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발생 지점의 주변 교통안전시설도 함께 점검할 것

### 3. 민원 친절

- 정비 및 민원처리와 관련 시민접촉, 전화통화 등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시민 질문 등에 성실히 답변하고 불필요한 언쟁, 토론 등을 자제할 것

## □ 교통법규 준수 철저

1.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 철저
  - 정비 목적 외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 금지(식사 목적 등)
  - 신호, 지정차로 등 교통법규 준수 철저(긴급 출동 시 경광등 점등)
  - ※ 붙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안 행정예고 알림

## □ 복무관리 철저

1. 출퇴근시간 등의 준수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금지, 유지행위 금지 등을 준수할 것
2. 휴가, 대체휴무 등의 민원처리
  - 휴가, 대체휴무 시 대체인력 확보 협조 및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접구역 담당자와 협업하여 긴급정비 및 민원처리 할 것
3. 근무 중 유기행위(음주) 등 금지
  - ※ 붙임 참조

## □ 보고 철저

1. 안전사고, 민원인 관련
  - 안전사고 발생, 민원인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신속하게 보고할 것
2. 정비, 민원처리 결과
  - 정비, 민원처리 결과 내용을 사진 첨부하여 보고할 것
  - 정비, 민원처리 미종결 및 연간단가 업체 활용이 필요할 경우 상세내용을 담당자에게 실시간 보고할 것
3. 기타
  - 복무 등 기타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통보(요청)할 것

## □ 기타 건의사항 등

- 1.
- 2.

## □ 교육 참석자 명단

# 음주운전 관용없다... "사망 발생땐 양형 최고형 구형"

2018-10-21

## 박상기 "사회적 피해 매우 심각한 범죄" 법무부, 엄중 처벌 및 제도 개선에 노력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18%에 비해 높다. 선고는 구형 대비 약 50%로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곧바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또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고, 보복 목적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피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 역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분	성명	서명	비고
구로	박영화	박영화	
	신명현	신명현	
강서	김영석	김영석	
	곽윤규	곽윤규	
양천	최종선	최종선	
	라일락	라일락	
영등포	윤상관	윤상관	
	이찬희	이찬희	
기전과	이성도	이성도	